

제주포럼 2019

북한 핵문제와 언론의 역할

5월31일 17:10~18:40

발표자: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 한국 언론의 북한 및 미국에 대한 보도 경향과 문제점

### 1. 한국 언론의 북한에 대한 경향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 주류 및 언론은 대체적인 의견 수렴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민주화이후 남북관계 및 동맹에 대해 진보와 보수진영간 의견 차가 뚜렷한 현상이 지속되고있음

#### (1) 진보 진영은 남북관계 중심적 사고

-한국 언론들, 진보는 남북관계 중심적 경향을 보여왔음. 이는 진보학계 및 민주당 정부의 경향성과 일치. 즉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 연관성 속에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보고, 남북대화에도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이 핵포기 전략적 결정했다고 단언하면서 남북관계에 공을 들이고 미북관계 중재자역할을 했음. 그러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시대 조류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 진보언론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강조. 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70년의 적대역사를 바꾸는 대 변화라고 주장했음.

-대체적으로 진보진영은 반미의식이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에 나서면서부터 비판을 자제하는 것도 이례적.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때만해도 트럼프를 전쟁광이라며 사진을 불태웠던 진보단체들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후 트럼프 비판을 자제하고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하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임

#### (2) 보수진영은 한미동맹 및 국제주의 중심시각에서 북한문제 접근

-보수 학계 및 언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는 동맹의 틀내에서 남북문제 보려고 하고, 북한의 구체적 말이나 행태보다 구조적인 관점 중시

-문화일보 등 이른바 보수언론은 미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불구하고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수단화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해왔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회담때 즉석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한 것도 비판.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 즉흥적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중대한 부담을 준 것등 비판

### 2. 북핵에 대해서도 뚜렷한 인식차

#### (1) 북핵의 과거 교훈에 대해 진보는 미국 탓, 보수는 북한 탓

1994제네바 합의가 붕괴된 원인에 대해 진보진영쪽은 조지 W 부시행정부가 합의를 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있음. 반면 보수진영은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나선 속임수 때문이라고 분석. .제네바합의후 고농축우라늄 개발 가속화. 대북 적대적인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임.

#### (2) 북핵은 협상용이라는 진보, 동맹해체용이라는 보수

진보진영 및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북핵을 기본적으로 협상용으로 보고 있음. 또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론에서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전환을 했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 체제 보장등 적절하게 협상을 하면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견지함.

조셉 윤 전 미국대북정책특별 대표등 국무부 전현직 당국자들은 북핵이 북한체제 보위용이며, 협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음. 그러나 필자는 북한이 화성14형 등 미국 본토타격용 ICBM개발에 나서면서 핵 문제가 체제보위용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고있음. 보수진영 분석가들도 “북핵이 한미동맹 와해,나아가 통일용”이라고 규정하고있음. 특히 이같은 인식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핵으로 동맹 흔들고,주한미군 철수시키려 한다. 나아가 통일까지 도모한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함. 실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적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이 미국 본토타격용 ICBM 발사에 나서자 김정은을 포용하며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한 유용한 카드로 접근하는 것도 주목할 만함.

### 3. 김정은 시대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할 일

#### (1) 김정은, 시도는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

2018년 비핵화 의지를 내걸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 나섰지만 비핵화 결심은 못한 상태로 2019년 판명. 앞으로도 핵폐기하지 않은채 제재 해제 관철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한 유엔 안보리 11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임. 북한은 국제 제재 받으며 경제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파키스탄형 국가가 될 듯. 김정은 체제의 만성적 불안 높아질 듯

김일성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서야 북한이 산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마지막 충고를 묵살했고, 김정일도 개혁개방 제스처만 취하다가 18년간 폐쇄체제를 유지해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길을 차단.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과대망상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판과 실수를 반복해옴

#### (2)북한관 개혁개방은 없을 것,과도한 낙관론 접어라

2018년 김정은이 대화 제스처를 보인 뒤 국내 진보 진영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형 개혁개방,나아가 베트남과 같은 개혁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음. 그러나 핵을 포기 하지 않는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할 것임. 미국이 제재 빗장을 풀지 않으면 북한이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등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도 불가능. 김정은 체제로는 중국이나 베트남, 나아가 미얀마와같은 개혁개방도 불가능함

#### (3) 문재인 정부, 남북중심 사고 탈피해 동맹 중심 현실주의 외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경험하며, 모든 외교 자산을 남북관계에 투입. 북한과의 대화 지속을 위해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종전선언 제안, 평화협정제안 등 무수한 제안을 했음.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핵폐기없이 이런 시도를 하면 한국의 생존이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정전협정은 지난 70년간 가장 평화롭게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는데 북한의 핵폐기 없이 이른 흔들면 정전체제 관리자인 유엔사의 존립 근거 없어짐. 또한 북방한계선(NLL)도 무력화하며 안보 위협이 생기기 때문임. 더구나 미중 무역 전쟁 전면화로 인해 미중 북핵 공조 더 어려워졌고, 해결도 더 힘들듯. 북핵문제는 미중공조 속에 해결되어야하는데 현재 미중은 갈등 전면화하고 있어 북핵 해결은 더 힘들어지고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한미동맹강화, 한일관계에 주력해야함

#### 4. 북핵 인식차 극복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전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

(1)진보와 보수 진영의 북한, 북한체제, 북핵 위협,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 너무 달라 이것을 좁히는 노력부터 해야 함.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좌파 시민 단체의 80년대 운동권 세대들이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어 대중적 괴리가 큰 상황임. 따라서 이 같은 대북 인식차가 극복되지 않고 확대될 경우 한국은 이념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도 있음.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와 러시아파가 나뉘어져있고 동부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음. 한국의 대북인식차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이념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계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서 북한 체제의 문제, 북핵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지속적 토론이 필요함. 언론 또한 진보 및 보수 진영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관성에서 탈피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보도를 해야 함.

(2)원샷 해결보다 한미동맹차원 관리하며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8년 이스라엘 방문해 학계 및 안보 전문가들과 대화 나눴는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솔루션 어딤션'을 반성하는 현실주의 기류가 강했음. 솔루션 집착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압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는데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임.

#### 5. 북핵 문제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위한 5가지 제언

첫째, 외교안보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대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팩트에 근거해 북한을 접근하고 분석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서적, 동정적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법률과 국제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내부를 분석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북한 접근법은 결국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북한 특수주의 인정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국제적, 비교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를 접근해야한다.

넷째, 북핵 문제는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아닌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 및 국제적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진보진영 일각에 팽배한 동맹 무용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식의 동맹 수단화 사고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한국이 전후 70년만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발전시켜온 덕분이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 시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끝>